

퇴직여성 재고용땐 장려금

정부 '고용기금'서 지급 추진... '가족간호 휴가'도 제도화

여성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노동부는 퇴직한 기혼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 급부금'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 고용 촉진책에 이런 방안을 추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를 검토중이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55살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 이상인 기업에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9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자녀·배우자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1회 1년 이내, 총 3년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규정됐으며, 노동부가 지난 5월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 1천4백9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4%인 1백85곳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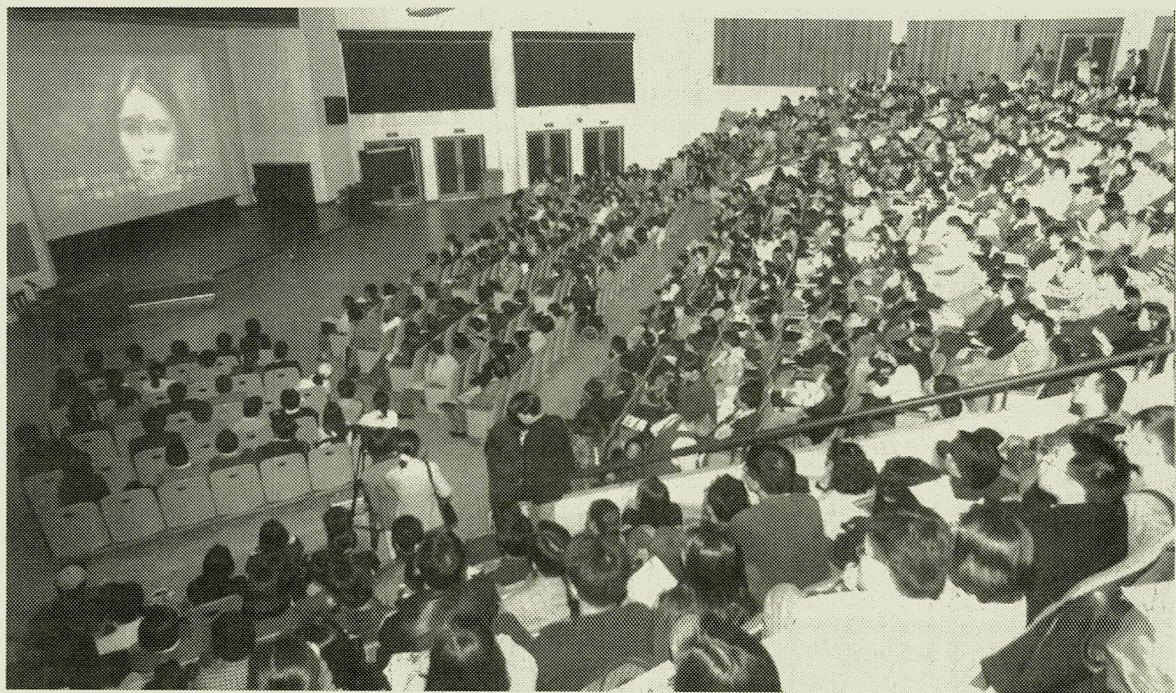
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가족간호휴가제가 육아휴직과 함께 여성이 직장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중 제도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살에서 66.1%로 높다가 25~29살 47.9%, 30~34살 47.5%로

크게 낮아진 뒤 35~39살 59.2%, 40~44살 66%로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구조로 결혼·출산·육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통기자



'인권영화제' 성황

2일 이화여대에서 개막된 제1회 인권영화제에 1천여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몰려 세계의 양심수들을 다룬 첫 상영작 <잊지 말자>를 관람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씨네21>이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8일까지 17개국 32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김종수 기자